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2025. 11. 20.(목) ~ 12. 18.(목)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

---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 목 록

## 00 공 통 ..... 01

- 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권장
- ② 위원회 서면심의 남용에 따른 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③ 업무추진비의 관내업체 활용 확대 및 집행기준 정비
- ④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성 확보 및 제출기준 개선
- ⑤ 행정사무감사 대응 준비 부족

## 01 법무감사관 ..... 02

- ① 종합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
- ② 출연기관 재정·계약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적정 사례 개선
- ③ 민원 처리 지연 해소 및 대량 민원 대응체계 강화
- ④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우수공무원 포상·인센티브 체계 정비
- ⑤ 조례 제·개정 후 실효성 평가 및 집행 모니터링 강화

## 02 공보담당관 ..... 04

- ① 홍보영상 직원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②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 ③ 시정소식지 발행·배포·잔량 관리 체계 확립
- ④ 투명한 여론조사 설계 기준 마련

**03 기획조정과 ..... 06**

-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의 제도 보완
-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 ③ 기간제 근로자 채용·운영에 대한 총괄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 ④ 출자·출연기관 감독 책임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 ⑤ 주민참여예산제 심사투명성 제고 및 신뢰회복 방안 마련

**04 회계과 ..... 08**

- ① 청사 대관 운영 규정 재정비
- ② 공유재산심의회 실질 심의기능 강화
- ③ 공유재산 시설관리 부실 해소 및 안전·소유관리 체계 정비
- ④ 신도시 공공청사 선제적 계획 수립 및 시민갈등 예방체계 강화
- ⑤ 주차장 운영 체계 전면 개선

**05 세정과 ..... 10**

- 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
- ② 세입·감면 사후관리 체계 강화
- ③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대비 연구성과 제고

**06 세원관리과 ..... 10**

- ① 적극적인 체납 관리 및 미래형 징수 역량 강화 당부

**07 자치행정과 ..... 11**

- ① 공무원·공무원 전보체계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 ② 국외출장 보고서 시민 공개 및 검증 체계 강화
- ③ 여론조사 용역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④ 국민운동단체 지원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⑤ 후원명칭 총괄관리 체계 정비
- ⑥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균형성 제고 및 교육 실효성 강화
- ⑦ 시민참여혁신·민관협치위원회 기능 조정 및 주민참여 강화
- ⑧ 주민총회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 ⑨ 행정서비스 기반시설 점검 및 정비 강화
- ⑩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점검 강화 및 지침 준수

**08 민원여권과 ..... 14**

-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 상담 실적 관리 체계 정비
- ②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권익보호 안내 강화

**09 정보통신과 ..... 15**

- ① CCTV·AI 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 효율성 개선

## 10 체육진흥과 ..... 16

- 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 효율 강화
- ② 체육시설 조성시 시민 의견 수렴 강화
- ③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및 시민수용성 확보
- ④ 시민체육대회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 ⑤ 체육시설 대관 규정 정비
- ⑥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의 투명한 추진 및 예산 집행 책임성 강화
- ⑦ 미사배수지 양궁장 공공성 재확립
- ⑧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시설 관리 강화
- ⑨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 당부

## 11 투자유치과 ..... 19

- ① K-스타월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 신뢰 회복 개선
- ② 기업 유치 전략·절차 및 성과 관리 체계 강화
- ③ 기업애로지원센터 사후관리 체계 마련

## 12 지역경제과 ..... 20

- 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 ② 위례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금 관련 소극적 행정 개선
- ③ 마을공동체 성과관리 체계 구축
- ④ 석바대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신속 추진

**13 청년일자리과 ..... 22**

-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관리 재정립
- ② 청소년 수련관 키오스크 사업 개선
- ③ 청년 커플매칭 사업 전면 재검토

**14 문화정책과 ..... 23**

- 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 개선
- ② 생활예술·전문예술 보조금 심사위원회 및 지원 체계 개선
- ③ 미관광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마련
- ④ 미사 문화거리 특성화 종합 전략 마련 및 활성화
- ⑤ 이성산성 축제 운영 기획·안전·업체 선정 기준 강화
- ⑥ 하남예총 예술제 운영의 공공성·전문성 제고 및 조직 운영 개선
- ⑦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의 투명성 강화
- ⑧ 하남문화재단 예비비 과다 편성 및 목적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15 복지정책과 ..... 26**

- ①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강화
- ② 복지사각지대 동별 발굴 편차 개선 및 공공·민간 연계지원 강화

## 16 노인장애인복지과 ..... 27

- ① 마루공원 근조기 운영기준 공정성·투명성 강화
- ② 장례지도사 근로계약 체계 및 인사·노무관리 개선
- ③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인력 확충 및 운영 역량 강화
- ④ 경로당 설치 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예산 확보 추진
- ⑤ 경로당 급식도우미 근로기준 및 퇴직금 산정체계 명확화
- ⑥ 원도심 경로당 노후시설 안전성 강화
- ⑦ 경로당 식단·영양관리 체계 개선
- ⑧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17 보육정책과 ..... 29

- ① 어린이집 안전 점검 강화 및 협업체계 확립 구축
-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체계 실효성 강화
- ③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회계관리 강화
- ④ 민간·기정어린이집 운영안정성 확보 및 노후시설 지원 확대

## 18 여성아동과 ..... 31

- 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리 전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
- ②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집행·홍보·발굴체계 개선

## **19 평생교육과 ..... 32**

-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 개선
- ② 명사특강 운영의 공정성·전문성·참여성 제고 방안 마련
- ③ 야간자율학습 식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체계 개선
- ④ 평생학습도시 성과 지속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 ⑤ 교복 납품 원산지 표기 및 실물 검수 강화

## **20 도서관정책과 ..... 34**

- ① 법정 사서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구조 개선
- ② 어린이도서관-영상미디어센터 기능 연계 및 운영 전략 강화
- ③ 공모사업 용도 변경 검토 체계 강화

## **21 도서관운영과 ..... 35**

- ①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및 취약도서관 지원체계 강화

## **22 하남문화재단 ..... 35**

- ① 기부금 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지역 예술지원 체계 강화
- ② 시립합창단 노사갈등 해소 및 운영체계·공연활성화 대책 마련
- ③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 ④ 버스킹 사업 예산 효율성 재고 및 지역 균형 활성화 방안 마련
- ⑤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 ⑥ 기획전시 홍보·평가 체계 개선
- ⑦ 글로벌 댄스 챌린지 사업의 타당성 부족 및 사후관리 강화

## **23 하남시자원봉사센터 ..... 40**

- 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 전략 마련
- ② ‘미라클 줍모닝’ 사업의 권역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③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24 하남교육재단 ..... 41**

- ① 캠퍼스 투어 참여 형평성 확보 및 교육 참여 독려
- ② 사업 사전검토 강화 및 예산 불용 방지체계 구축
- ③ 장학생 선발 일정관리 부실에 따른 행정 신뢰성 제고

**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권장**

-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② 위원회 서면심의 남용에 따른 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위원회 서면심의를 경미한 안건에 한정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비교란 등에 명확히 표기하여 기록으로 남기며, 정책·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대면심의로 전환하기 바람.
- 서면·대면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③ 업무추진비의 관내업체 활용 확대 및 집행기준 정비**

- 업무추진비 및 각종 물품·다과 구입 시 가급적 관내 전문업체를 우선 검토·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여성기업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도 품목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하기 바람.
- 구매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내업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④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확성 확보 및 제출기준 개선**

- 제출된 자료의 구성과 내용이 미비하여 사업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시 완성도 높은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⑤ 행정사무감사 대응 준비 부족

-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숙지하지 못해 성실한 답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감사 대비 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부서 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 법무감사관

[5건]

#### ① 종합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 강화

-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머무르는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청렴도 세부 지표의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청렴협의체 회의 내용·논의 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렴·조직문화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 전반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② 출연기관 재정·계약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적정 사례 개선

- 출연기관이 대규모 행사를 여러 건으로 쪼개어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 반복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업체보다 관외·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확인되어 특혜성 계약·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 관련 업체·횡수·금액·사유 등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용 내역을 연도별·사업별로 전수 조사하고 향후 발생하는 잉여금은 세출예산으로 집행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감사결과와 후속조치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감독기관으로서의 의회 협조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주요 내용과 조치계획을 정리해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바람.

또한 향후 감사 관련 자료 요구 시 담당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정해진 기한 내 신속·성실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③ 민원 처리 지연 해소 및 대량 민원 대응체계 강화

○ 민원 지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동일 부서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연 원인 분석·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도입·업무량 조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 감일 교통민원과 같이 대량 민원 발생 시 대응 매뉴얼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바람.

#### ④ **저연차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우수공무원 포상·인센티브 체계 정비**

- 실수가 있는 저연차 직원을 징계하기보다는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단계별 교육·멘토링·외부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동일 유형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며, 향후 관련 제도를 조례·지침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감사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최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감사 유공 표창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표창이 인사상 실질적 인센티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람.

#### ⑤ **조례 제·개정 후 실효성 평가 및 집행 모니터링 강화**

- 조례 제·개정 이후 일정 기간마다 집행 여부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미집행·사문화된 조례에 대해서 정비·폐지·보완 등 조치를 검토하며, 특히 의원 발의 조례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해 적극 행정을 펼치기 바람.

## **공보담당관**

[4건]

#### ① **홍보영상 직원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홍보영상 제작 시 직원의 초상권·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이익 금지 규정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

## ②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 홍보 예산이 KT가 관리하는 특정 아파트 단지에만 집중되어 비아파트 거주 시민이 홍보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므로, 주거형태별 접근권을 고려한 다채널 홍보체계 마련 및 특정 업체 독점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 ③ 시정소식지 발행·배포·잔량 관리 체계 확립

- 시정소식지 배포 후 열람률·수령률·잔량·폐기량에 대한 통계가 관리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크므로, 기관별 잔량·폐기 실태를 실측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행부수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④ 투명한 여론조사 설계 기준 마련

-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보도가 동일 계열사일 경우 광고·홍보 연계 가능성과 객관성·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여론조사 설계 시 지역 언론 매체를 확대하는 등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의 제도 보완**

-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가·나군 등) 구분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한 홍보 시 특정 부서 또는 직렬 편중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발·안내 체계를 정비하기 바람.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과 외부경제 변수(금리, 경기, 부동산 등)를 함께 반영한 재정위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의 지방채 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바람.
- 금융권 차입 지방채 활용에 따른 재정부담과 상환계획을 명확히 수립·공개하여 재정건전성과 자족도시 기반조성 간 균형 있는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기간제 근로자 채용·운영에 대한 총괄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 기간제 근로자 승인·채용·근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채용 지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 공공일자리·장애인일자리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하되, 고령자·준고령자 우선채용, 표준 채용안 적용, 시민·지원자 의견 수렴

(간담회·설문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로 개선하기 바람.

#### ④ 출자·출연기관 감독 책임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결산·잉여금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기획조정과의 검토·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재단 등 기관의 재정 운영이 법령·조례·지침과 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 ⑤ 주민참여예산제 심사투명성 제고 및 신뢰회복 방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공공성·우선순위를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안 단계부터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반려 사유를 제안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제안 반영률·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 참여예산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람.

**① 청사 대관 운영 규정 재정비**

- 청사 대관 신청 자격과 공익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적 행사·특정 단체 위주 사용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만큼, 사익·종교·정치성 행사에 대한 대관 금지 기준과 심사 절차를 명확히 재정비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승인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② 공유재산심의회 실질 심의기능 강화**

- 공유재산심의회가 원안가결 중심으로 운영되고 서면 심의가 과도하게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 구성의 전문 분야 편중과 시민 대표성 부족을 해소하여 실질적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③ 공유재산 시설관리 부실 해소 및 안전·소유관리 체계 정비**

- 석바대 2층 고객센터 미정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안전 사고 위험이 크므로, 시 재정·단계적 리모델링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 관점에서 공유재산 유지관리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요구함.
- 창우 배드민턴장 부지 건물 소유·재원 이력을 정리하여 관리 체계 미비를 해소하기 바람.

#### ④ 신도시 공공청사 선제적 계획 수립 및 시민갈등 예방체계 강화

- 입주 시기와 연계된 청사 건립 일정·규모·기능 배치에 대한 종합계획이 부족해 ‘입주 후 뒤늦은 청사 건립’으로 인한 시민 갈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공청사의 입지·규모·복합 기능을 인구전망·생활SOC 수요와 연계해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갈등영향분석 등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소음·교통·주차 등 예상 민원을 사전에 진단·완화하는 청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⑤ 주차장 운영 체계 전면 개선

- 본관 현관 앞 상시 편법주차(의전·관용차 포함)와 주차통제 기준 부재, 코로나 이후 보건소 주변 주차구역의 장기 폐쇄로 인한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주차 가능 대수를 정확히 산출하며 알림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관 앞 불법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보건소 주변 주차구역을 정상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세정과

[3건]

### 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

- 이용 건수가 감소하고 조례 부재·상담 시간 제약 등의 문제가 있어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운영 조례 제정·예약 시스템 도입·야간상담 확대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바람.

### ② 세입·감면 사후관리 체계 강화

- 도세 징수율 변동폭이 크고 체납액 추세 관리가 미흡하므로, 실질적 징수율 분석 및 세입 목표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③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대비 연구성과 제고

- 출연금 대비 연구성과가 단순 자료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고 우리 시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가 부족하므로 출연금에 상응하는 실질적 연구성과와 피드백을 요구하고, 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 세원관리과

[1건]

### ① 적극적인 체납 관리 및 미래형 징수 역량 강화 당부

- 가상자산·비금융자산 등 신종 재산에 대한 추적·평가·압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당부함.

**① 공무직·공무원 전보체계 개선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

- 현재 공무직의 인사발령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부서에 장기근속자가 집중되어 업무 편중 및 조직 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보가 가능한 직무군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속 기간과 부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유능한 행정직 인력이 본청에 집중되고 격무부서에 반복 배치되는 인사 불균형으로 번아웃과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기술직 전보현황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리·관리하고 행정직을 대상으로 동 ↔ 본청·사업소 간 순환, 사업부서 ↔ 지원부서 간 순환을 통해 인사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사업 역량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바람.

**② 국외출장 보고서 시민 공개 및 검증 체계 강화**

- 국외출장 보고서는 현재 행정망에만 공개되어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처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출장 시 프로그램 참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자료, 현장 사진, 참석 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를 의무화하고,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충실성을 검토하는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바람.

### ③ 여론조사 용역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여론조사 용역 발주 시 업체 선정 기준·예산 산정·조사 방식 결정 이유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특정업체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선정절차를 강화하기 바람.
- 관내 언론사 포함 다양한 조사기관의 용역 수행 가능성을 검토·비교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론조사 목적·활용계획·비용 구조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④ 국민운동단체 지원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국민운동단체의 활동 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차량 기준을 재정립하고 노후 차량의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교체 시 공용차량 관리 기준에 따라 단체와 협의해 적정 차량을 검토하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공용 차량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바람.
- 국민운동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유재산 또는 LH 부지를 활용한 사무공간 제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⑤ 후원명칭 총괄관리 체계 정비

- 소관부서의 후원명칭 승인 및 사용 여부를 재점검하여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관련 조례와 내부지침을 정비하여 심의체계, 승인권한, 총괄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 ⑥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균형성 제고 및 교육 실효성 강화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 특정 방향으로 편중되고 주민 주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므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사업 목적·방식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기 바람.
- 주민자치 교육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활동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이 미흡하므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⑦ 시민참여혁신·민관협치위원회 기능 조정 및 주민참여 강화

-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 역할 중복과 협업 부재로 인해 주민 접근성과 참여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전문가 중심 구성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동별·계층별로 다양화하여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바람.
- 위원회 증가와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기 바람.

## ⑧ 주민총회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 동별로 현수막·음향 장비 등 일회성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편차가 큰 문제가 있어, 행사성 소비를 줄이고 공용 장비(음향) 도입 등 예산 사용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⑨ 행정서비스 기반시설 점검 및 정비 강화

- 무인우편접수기가 시민 이용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접근성이 낮고, 동 게시판 또한 장기간 미정비로 도시 미관 및 정보 전달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두 시설 모두 전수 점검 후 위치 조정·장비 보강·스마트 전자게시판 도입 등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바람.

## ⑩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점검 강화 및 지침 준수

- 기간제 근로자 승인기간(1월 1일~12월 31일)과 실제 계약 시작일(1월 2일)이 불일치하여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 설정 및 계약일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내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람.

## **민원여권과**

[2건]

###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 상담 실적 관리 체계 정비

- 사회적 배려대상자 상담이 단순 민원 상담 건수에 합산되어 별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취약계층 대상 정책 설계와 분석이 어려우므로, 향후 대상별 실적 분리와 체계적 통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 ②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권익보호 안내 강화

- 민원 접수부터 처리·통보 과정 전반에서 고충처리위원회, 행정배심원제 등 시 자체 권익구제 제도 안내가 누락되어 시민의 선택권과 권익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민원 서류와 안내문에 권익구제 절차를 명시하여 시민 권익을 강화하기 바람.

## 정보통신과

[1건]

### ① CCTV·AI 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 효율성 개선

- 사업별 핵심성과지표(KPI) 마련, 범죄·안전사고 감소율·관제 효율성 등 정량적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CCTV 신설·교체 설치-저장장치 확충-AI 관제 연계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바람.
- CCTV 및 AI 관제사업의 투자계획·운영개선·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심의 전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 추진일정을 보고하기 바람.

**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 효율 강화**

- 학교 개방은 확대되었지만 학생·청소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부족해 야간·주말에는 성인 이용자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학교장의 부담이 줄어든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 우선 이용시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스쿨매니저 등 전담 관리인력을 도입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바람.

**② 체육시설 조성시 시민 의견 수렴 강화**

- 체육시설 설치 과정에서 소음 민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사전 영향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음도 조사와 주민 참여 절차를 강화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람.

**③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및 시민수용성 확보**

- 파크골프장 조성 후보지별 행정절차, 인허가, 사업 기간, 예산 부담 구조를 종합 검토한 명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바람.
- 당정근린공원 추진 시에는 주차장 확보·진입계단 설치 등 필수 기반시설을 선행 조치하고,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바람.
- 경정본부·경기도·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일정별로

구체화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④ **시민체육대회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 시민체육대회 운영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대회별 안전 매뉴얼과 비상계획을 표준화하고 체육회·도시공사·시의 역할 구분을 재정비해 운영 안전성을 높이기 바람.

#### ⑤ **체육시설 대관 규정 정비**

- 체육시설 대관과정에서 설치·철거시간 기준이 없어 공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청자와 입금자 불일치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관 규정과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마련해 문제를 즉시 시정하기 바람.

#### ⑥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의 투명한 추진 및 예산 집행 책임성 강화**

- 민관협업 TF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모든 협의체는 조례·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록관리(회의록·서명)를 갖추어 투명한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람.
- 일부 시민 의견을 전체 시민 의견으로 간주하여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바람.
-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본래 취지대로 ‘이전의 필요성 및

가능성' 중심으로 범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과도한 부지 확정과 정책 선도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 중단된 용역의 남은 기간과 범위를 재검토하여 가급적 조속한 준공을 추진하되, 향후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미집행 예산에 대한 불용·반납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향후 유사 사업의 용역 발주 시에는 설문지 품질·검토 과정 강화, 진행관리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⑦ 미사배수지 양궁장 공공성 재확립

- 양궁장이 하남시 전체 양궁인(학생·장애인선수·동호인 포함)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전제로 행정적 판단을 재정립하고, 이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책무를 명확히 이행하기 바람.

### ⑧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시설 관리 강화

- 생활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의 운영을 시민 우선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정비하고, 클럽 중심의 비공식 운영 등 부적정한 관행을 즉시 시정하기 바람.
- 도시공사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 사항을 조치하고, 시설 내 코치 공간 등 사적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생활체육시설 조성·개선 시 예산 제약으로 최소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시민 이용 편의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⑨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 당부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실제 채용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투자유치과

[3건]

### ① K-스타월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 신뢰 회복 개선

- 해당 사업은 규제 완화 절차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 예산과 용역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람.
- K-스타월드 추진 과정에서 시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려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미래 비전과 설득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경제 파급효과와 사업 필요성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적극적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시민 요구를 충분히 경청하는 체계적 소통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 추진 일정, 자원 조달 계획 및 향후 관리 방안을 포함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각종 용역의 결과물이 실제 정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람.

## ② 기업 유치 전략·절차 및 성과 관리 체계 강화

- 개별 사업 위주 대응으로 기업 유치 전략과 성과 관리가 미흡하므로, 중장기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 및 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위원회 회의록이 회의 개요 수준에 불과하고, 위원 서명부 및 회의 내용 누락이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회의 절차에 체계적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기업 유치 시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불명확하므로, 고용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 기준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바람.

## ③ 기업애로지원센터 사후관리 체계 마련

- 기업애로지원센터는 2025년에 접수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사후 만족도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향후 모든 처리 완료 건에 대해 전화·온라인 방식의 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추가 조치와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바람.

## 지역경제과

[4건]

### 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정된 노블레스 및 미사강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외 실질적인 지원이 부재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 마케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 ② 위례 열병합발전소 주민지원금 관련 소극적 행정 개선

- 위례 주민지원금과 관련하여 7년 동안 명확한 집행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대표의 적법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식적 단체 기준 정립, 주도적 행정을 하기 바람.

## ③ 마을공동체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과보고서 미제출과 서면평가 부재 등으로 체계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보완하고 단계별 이행 상황 및 성과를 문서화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④ 석바대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신속 추진

- 석바대 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1년 가까이 리모델링이 지연돼 외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가 지속되므로, 시비 투입 또는 특조금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 2층 리뉴얼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관리 재정립**

- 장기 과정의 적정성 재검토, 탈락자 사유·맞춤지원 분석, 과정별 선발·교육체계 개선, 실제 취업 중심의 성과지표를 재정립하기 바람.

**② 청소년 수련관 키오스크 사업 개선**

- 2025년 사업임에도 키오스크가 설치만 되고 시스템 연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계약 및 과업지시서 검토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12월 중순까지 정상 운영을 확실히 개시하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③ 청년 커플매칭 사업 전면 재검토**

- 청년 커플매칭 사업이 타 지자체의 비효율 사례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었고, 홍보물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제작된 바, 사업 목적과 추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요구로 취업준비생 및 비정규 청년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 대비 정책효과를 재평가하기 바람.

**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 개선**

-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1·2차 공모 기준이 달라지면서 지역 예술인 참여 비율이 크게 줄고, 특히 외부 작가 중심 운영으로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과 불일치가 있어, 지역 예술인 우선 배점과 공모 기준의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향후 유사 사업에서 지역 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바람.

**② 생활예술·전문예술 보조금 심사위원회 및 지원 체계 개선**

- 일부 단체가 생활예술 및 전문예술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등 지원 자격 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됨에 따라 지역 예술 생태계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여 생활예술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③ 미관광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 마련**

- 미관광장은 1년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행사만 개최될 정도로 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시민 안전을 위한 야간 보행 환경 개선과 더불어 미관광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④ 미사 문화거리 특성화 종합 전략 마련 및 활성화

- 미사 문화거리는 테마와 정체성이 부재해 문화·관광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흡연부스 등 환경 관리도 미흡해 시민 불편과 상권 저해 요소가 지속되고 있어 거리 특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과 청년·학생 참여형 콘텐츠 개발,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활성화를 추진하기 바람.

#### ⑤ 이성산성 축제 운영 기획·안전·업체 선정 기준 강화

- 이성산성 축제에서 협상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의 공공행사 운영 역량이 부족하여 축제 전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는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행사 품질을 제고하기 바람.
- 안전관리계획서에 교육 이수증 누락, 운영요원 교육 미실시 등 기본 요소가 결여되어 다수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므로,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바람.
- 조형물 중심의 단발성 행사와 지역성 부족한 폴리마켓 운영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낮아 향후 지역성 중심 축제 기획을 검토하기 바람.

#### ⑥ 하남예총 예술제 운영의 공공성·전문성 제고 및 조직 운영 개선

- 하남예총이 주관한 예술제가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단체 내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축제의 공공성과 기획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지회장 및 사무국장 인사 논란과 전공 여부 문제까지 겹쳐 단체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예술제 기획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예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 예술 생태계를 개선하기 바람.

### ⑦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의 투명성 강화

- 어린이도서관 3·4층 전체를 센터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당초 설계 목적과 상충하며, 공간 활용 계획 및 관련 협의 근거 또한 불명확하여 사업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므로, 어린이도서관 고유 기능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에 대한 대안 검토와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⑧ 하남문화재단 예비비 과다 편성 및 목적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

-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을 대비해 설정하는 항목이지만, 과도하게 잡으면 투명성·책임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임의적 비용 집행의 통로가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산정 근거 없이 과도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비비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 주관부서로서 재단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유·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단의 모든 계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며, 위법 또는 부적정 계약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시정·보고와 함께 재발방지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 바람.

## **복지정책과**

[2건]

### **①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강화**

- 무연고 사망 증가 원인과 사회·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사전 예방 중심의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간 공과금 미납·의료 미이용·생활징후 이상 등 위험 신호를 복지플래너·무한돌봄과 즉시 연계하여 사전예방형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바람.

### **② 복지사각지대 동별 발굴 편차 개선 및 공공·민간 연계지원 강화**

- 동별 발굴 편차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발굴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인력 재배치, 집중 발굴기간 운영, 촘촘한 방문체계 구축 등)을 마련하기 바람.
- 민간자원 연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 복지관·푸드뱅크·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사례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바람, 단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기초수급·차상위·긴급지원 등 공공지원 연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 효과가 나타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 바람.

**① 마루공원 근조기 운영기준 공정성·투명성 강화**

- 마루공원에 설치된 정치인 및 선출직 공무원 명의의 근조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해당 설치·철거 업무를 직원이 수행하는 등 특혜성 행정이 지속되어 왔으나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조기의 설치·관리·철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설치된 근조기는 기한을 정해 회수·철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지침을 정비하기 바람.

**② 장례지도사 근로계약 체계 및 인사·노무관리 개선**

- 장례지도사 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조속히 작성하도록 조치하고, 부당전보 및 절차 위반 사항을 재발 방지하도록 대행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③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인력 확충 및 운영 역량 강화**

-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 인력 2명으로는 지도·점검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종사자 대상 회계 및 근로계약 관련 교육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바람.

#### ④ 경로당 설치 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예산 확보 추진

- 미사2동·감일동 일부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현장점검을 통해 어르신 불편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로당 설치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취약지역 어르신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바람.

#### ⑤ 경로당 급식도우미 근로기준 및 퇴직금 산정체계 명확화

- 노인일자리 10개월과 시비 2개월을 합산하면 1년 근로에 해당함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계약형태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급식도우미의 근로시간·계약구조·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관련 산출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근로권의 침해가 없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기 바람.

#### ⑥ 원도심 경로당 노후시설 안전성 강화

- 원도심 경로당의 노후된 구조와 방법창·계단 등으로 화재 및 이동 안전 문제가 제기되므로, 경로당의 노후·안전 취약 요소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방법창·출구 구조 개선 등 안전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어르신 이용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바람.

#### ⑦ 경로당 식단·영양관리 체계 개선

- 경로당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 식단 관리가 미흡하며, 일부 경로당의 의견만 반영되어 전체적인

실태를 반영한 조사와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식단 및 영양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표준 식단 모델과 위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바람.

## ⑧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장기요양기관 심사에서 운영규정·회계기준·급여지침·예산 산출 근거가 미흡한 시설이 심사단계까지 올라오고, 가결된 시설에서도 동일 지적이 반복되는 등 사후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정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부결·재심 대상의 보완 절차를 엄정히 시행하며 가결 시설도 개선 완료 시까지 사후확인과 지도 점검 연계를 강화하기 바람.

## **보육정책과**

[4건]

### ① 어린이집 안전 점검 강화 및 협업체계 확립 구축

- 어린이집 CCTV 미보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 통학버스 점검률 저조 등 아동 안전의 핵심 부분에서 반복적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CCTV·급식위생·통학버스 전 영역에 대한 정기·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지원센터·경찰·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아동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 ②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계 실효성 강화

- 온라인 회계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대면·비대면

점검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부족하므로, 점검 예산을 현장점검 필요도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하고 대면·비대면·자체점검 간 균형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바람.

### ③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회계관리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것은 사전 예방체계와 회계관리 역량 부족에 기인한 문제로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교육·컨설팅·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④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안정성 확보 및 노후시설 지원 확대

- 원아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운영 안정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연 3천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받는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시설 개선조차 어려워 지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노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시설보수·환경개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 공모·시 자체사업과 연계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관리 전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

-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종사자 채용 시 필수인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어, 종사자 채용 전 의무조회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구축 및 책임자 지정 등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피해아동을 동반한 체험학습에서 제3자가 동행하는 등 후원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되었으며, 출근부·보육일지·후원금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운영윤리와 회계관리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후원금 집행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운영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재위탁 시 법인의 도덕성·자격·운영능력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②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집행·홍보·발굴체계 개선**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되지 않아 실제 지원대상 파악이 미흡했을 우려가 있어 대상자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 사업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사업이 도달하도록 운영체계를 보완하기 바람.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 개선**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장 체계의 전문성 부족, 부서와 분리된 사무공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초과 근무·출장·병가가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는 근태관리의 불균형, 출장 목적·기록의 부실 및 반복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조직·업무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람.

**② 명사특강 운영의 공정성·전문성·참여성 제고 방안 마련**

- 명사특강의 강사료 및 강사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특강 주제 또한 시정 방향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평일 오전 개최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에 강사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고, 시정과 연계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며, 주말·저녁 등 시민이 참여하기 쉬운 시간대로 확대하는 등 특강 운영의 공정성·전문성·참여성을 제고하기 바람.

**③ 야간자율학습 식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체계 개선**

- 야간자율학습 석식·간식비 지원이 일부 학교에만 집중되고 초기 수요 파악 미흡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학교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한 점이 확인된 만큼, 관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참여 예상 인원 산출, 전액 지원이 어려운 경우 학교별·학생별 차등 지원 등 합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④ 평생학습도시 성과 지속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 평생학습도시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내부 인력과 예산이 감소하여 사업의 내실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평생교육사 3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일반행정직 대체만으로는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충분한 평생학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년도에는 평생교육사 인력의 실질적인 증원을 검토하기 바람.

#### ⑤ 교복 납품 원산지 표기 및 실물 검수 강화

- 경기도 내 여러 학교에서 교복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납품한 허위표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원산지 표기와 실제 납품 제품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 검증에 그치지 않고 실물 검수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복 샘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바람.

**① 법정 사서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구조 개선**

- 법정 사서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중·장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 단계적 정규직 비율 조정 등 전문성 기반의 인력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어린이도서관-영상미디어센터 기능 연계 및 운영 전략 강화**

- 영상미디어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은 기능과 대상이 상이함에도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됨에 따라 어린이 중심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시 어린이·청소년 대상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어린이도서관과의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다양한 연령층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청소년 및 성인 이용자까지 포용하는 세대 통합형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③ 공모사업 용도 변경 검토 체계 강화**

- 어린이도서관 내 생활SOC 사업(국비) 공간에 다른 용도인 경기도 공모사업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검토가 미흡해 공모 목적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공모사업

용도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고 법률 검토를 강화하기 바람.

## **도서관운영과**

[1건]

### **①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및 취약도서관 지원체계 강화**

- 평가 미참여 및 저등급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 중단이 아닌 원인 분석과 개선 중심의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 작은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운영이 취약한 도서관의 폐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하남문화재단**

[7건]

### **① 기부금 관리의 적정성 확보 및 지역 예술지원 체계 강화**

- 주민자치회가 의결을 거쳐 기부금을 출연했는지 관련 서류 일체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 주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홍보·성과 보고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업·단체·개인 후원자와의 지속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기부금 확보 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기부 기업 간의 매칭·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후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 국민은행 지정기부금 요청 경위·협의 과정·약정 내용·사용 내역·어느 정도 홍보 혜택을 받았는지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기부금 수령·사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 ② 시립합창단 노사갈등 해소 및 운영체계·공연활성화 대책 마련

- 시립합창단 노사갈등이 시민 불편과 도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협상 일정·중재 방안·단계별 해결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5년 내 해결을 추진하며, 동시에 경기도·전국 시립예술단 근로조건 비교를 통해 하남시립합창단 처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안정적 보수체계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기 바람.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계적 처우 개선 원칙을 마련하고, 노사 협의 과정에 시민 의견과 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 구조를 구축하며,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협상 일정과 조정안을 제시하고, 갈등 장기화 시 예산 전반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인식하여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침해를 해소하고, 외부 초청공연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해 하남시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공연 추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시립합창단의 프로그램을 합창 중심에서 한 단계 확장하여, 오페라, 뮤지컬, 협연·콜라보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기획공연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휘자·전문가 협의 및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③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 2025년 글로벌 댄스 챌린지 사업의 추진 경위, 예산 편성·집행 내역,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시와의 협의 절차를 상세히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대규모 신규 사업은 사전 계획 수립·예산 편성·의회 심의를 필수로 하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의 근거·선정 절차·가격 산정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수의계약 사전검토·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며, 향후 역대 규모 사업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내부 계약 규정을 강화하며, 반복적 수의계약 및 쪼개기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출자·출연기관의 예비비는 공공 자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적정 규모로 사전 계상하고, 예비비 편성 한도와 용도 제한 기준에 맞도록 관련 실무 관행을 즉시 시정하기 바람.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회계·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의 편성, 이월, 전용,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바람.
- 이사회 회의수당의 책정 및 변경은 반드시 관련 조례와 의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수당 인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모든 이사회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바람.

#### ④ 버스킹 사업 예산 효율성 재고 및 지역 균형 활성화 방안 마련

- 버스킹 사업은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운영 계획이 부족하며, 유료 버스커 출연료 집행의 효율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바람.
- 현재 버스킹 사업 운영이 미사 지역에 집중되어 원도심·감일·위례 지역의 버스킹 활성화가 미흡하고, 자율버스커 모집·홍보 부족으로 시민 참여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시민 중심의 자율 참여형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버스킹 운영을 도모하고 참여 환경 개선을 하기 바람.

#### ⑤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 하남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시 현황을 즉시 점검하고, 최신 자료로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⑥ 기획전시 홍보·평가 체계 개선

- 각 기획전의 언론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별 관람객 현황과 홍보 성과를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획전 개선에 활용하기 바람.

-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여 응답률을 높이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시 기획에 반영하는 내부 절차를 구축하여 전시 품질 향상에 활용하고, 전시 홍보와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기획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바람.

#### ⑦ 글로벌 댄스 챌린지 사업의 타당성 부족 및 사후관리 강화

- 글로벌 댄스 챌린지 사업은 행사성 사업인 만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용역 계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연 계약이라는 다른 형태로 수익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내부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글로벌 댄스 챌린지 사업은 홍보효과 대비 실제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 참여형 사후평가를 실시해 의회에 보고하며, 향후 기부금 의존형 사업계획은 지양하기 바람.
- 아울러 조회수와 도달률 등 홍보 성과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바람.

**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선 및 활성화 전략 마련**

- 직장인·청년층의 시간대에 맞춘 주말·야간 프로그램이 부족해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권역별 확대 운영을 통해 등록율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바람.
- 홍보 강화, 기관·기업 연계 확대, 시간대 다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② ‘미라클 줍모닝’ 사업의 권역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미라클 줍모닝’이 미사지역 중심으로 운영되어 권역 간 참여 격차가 발생하며, 운영 시간대(08:30)가 환경미화원 청소 직후라 실제 쓰레기 수거 효과가 낮아 시민·상인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일·원도심 등 타 권역으로의 확대 운영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오후 4~5시대로 시간대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실효성 중심의 프로그램 체계로 재설계하기 바람.

**③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마일리지 제도가 재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참여 증가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운영하고, 현금성 보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 봉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기 바람.
- 마일리지 미수령 사유와 절차상의 문제, 사후관리 체계 및 미집행

예산 처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분석·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가맹점 수 확대보다는 봉사자들의 실제 사용 빈도와 선호 업종을 반영한 실효성 중심의 가맹점 관리를 하기 바람.

- 마일리지에 의존한 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공유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하남교육재단 [3건]**

### **① 캠퍼스 투어 참여 형평성 확보 및 교육 참여 독려**

- 캠퍼스 투어에 모든 학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독려체계를 강화하고, 참여 저조 학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내 학생 모두가 공정한 진로탐색 기회를 보장하기 바람.
- 캠퍼스 투어·기업체험 프로그램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우선 배려 및 참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계층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② 사업 사전검토 강화 및 예산 불용 방지체계 구축**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예산 편성 사유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가능성·일정·협업 준비 등을 충분히 반영해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 ③ 장학생 선발 일정관리 부실에 따른 행정 신뢰성 제고

- 장학생 선발 결과 발표가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대상자에게 이틀 전에 통보되어 학생·학부모에게 불안과 혼선을 초래하므로, 향후 충분한 통보기간을 확보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